

주간 통일정세

2015-29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국정원 해킹 의혹에 입장 표명...“국정원 해체하라”(7/24,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정보원은 반공화국 모략과 음모의 소굴인 동시에 괴뢰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반인민적인 정보사찰과 테러를 본업으로 하는 인권유린의 본거지”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이어 “괴뢰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해외 컴퓨터와 손전화기에 사용했으며 대다수가 우리와 연계된 IP 주소라는 것을 실토한 것은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킹 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조평통은 또 농협 전산망 마비 등 그동안의 사건을 열거하며 “괴뢰패당은 남조선에서 수많은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북의 소행’으로 여론을 매도하면서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소동에 광분해왔다”고 비난함.
 - 조평통은 “과소 독재의 도구이며 동족대결과 테러, 음모의 소굴인 괴뢰정보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주범들은 역사와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국정원을 당장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북한 “남한 도발 배후는 미국”...백령도 조준사격 ‘경고’(7/25, 연합뉴스)
 - 북한 인민군 관문점대표부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최근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매일 같이 광란적인 포사격 훈련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군사적 도발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인민군 관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참여한 서남해상열점수역에 괴뢰들을 내몰아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을 쉬임없이 자주 벌리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불순한 흥계가 깔려 있다”고 비난함.

- 그는 “미국이 서남해상 열점수역에서 괴뢰들을 내몰아 군사적 도발을 감행케 하고 있는데는 퇴색되어가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명분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어리석은 속내도 숨겨져 있다”고 지적함.
-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미국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 것을 한두 번만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도발의 본거지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의 무차별적인 직접조준사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북대화 하려면 분위기부터 조성하라”(7/24, 우리민족끼리)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는 24일 우리민족끼리’에 기고한 글에서 남측의 대화 제의를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반민족적 최악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뻔뻔스러운 망동”이라고 주장함.
 - 그는 “북남관계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에 추종한 괴뢰패당의 악랄한 대결정책으로 하여 도저히 마주앉을 수도 없고 한치도 전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서 남측에 대해 대결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함.
 - 북한은 그러면서 남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미국과의 연합군수지원훈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등을 남한측 대결 책동의 구체적인 사례로 꼽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남북 체육교류 빛장 쏜다”…유소년축구대회 재추진(7/21,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1일 남북한이 2015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를 다음달 중순께 평양에서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는 보도함.
 - 민화협 관계자는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북한측과 대회 개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뉴스는 이 대회가 원래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메르스 유입을 우려해 두 차례나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함.

- 북한 해커, 伊 해킹팀 유출 취약점 이용해 악성코드 유포(7/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기술을 활용해 최근 국내 인터넷망에서 악성코드를 유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보도함.
 - 보안업체 하우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해커가 탈북자 모임 사이트, 북한 연구자 사이트 등 북한 관련 웹사이트 5곳에 침투해 장악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PC에 자동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전함.
 - 해커는 이렇게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 남북 민간단체, 23일 개성서 8·15 공동행사 개최 논의(7/23, 연합뉴스)
 - 남북 민간단체가 광복 70주년 계기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개성공단에서 실무접촉을 갖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는 지난 6일 북측의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북측 준비위)에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지난 20일 북측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도 전날인 22일 8·15 남북공동행사 논의를 위한 남측 준비위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발언 관련 '괴뢰패당이 제아무리 대화타령을 늘어놓아도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미쳐 날뛰 저들의 흉악한 몰골을 감출 수 없다'며 '괴뢰당국자들은 반공화국 도발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쳐놓은 죄악에 대해 사죄하며 대결정책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7.20,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사회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의 산물'이라며 '불법적인 감시조치를 강화하다 못해 그 죄행을 숨기기 위해 동족을 걸고드는 짓도 서슴지 않는 괴뢰패당이야말로 파렴치한 역적무리'라고 비난(7.20, 평양방송)
- 차 대통령 對北발언(체제불안정, 예측할 수 없는 도발) 등 거론 '반공화국 모략선전은 남북대화의 길에 더 높은 차단벽을 쌓기 위한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라며 '모략선전에 미쳐 돌아가는 반역무리들(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보수언론 등)은 멸적의 조준경 안에 항상 들어있다'고 위협(7.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100호(7.23)】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괴뢰정보원의 불법 해킹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박OO'라고 대통령 실명 비난 및 국정원 해체와 반정부 투쟁 선동(7.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7.23)】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후 '괴뢰패당의 진보민주 통일세력'에 대한 파쇼적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파쇼폭압통치로 얻을 것은 준엄한 심판과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비난(7.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방부의 '北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도발 가능성' 분석(7.17,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에 대해 '대화타령의 침방울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北)를 또다시 악랄하게 혈똥었다'고 비난하며 '우리(北)와의 대화가 소원이라면 속에 품은 칼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7.23,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언론의 '北 생화학무기연구소 연구원 핀란드 망명' 보도 관련 "헛나발"이라며 '오늘날 모략과 날조는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7.23, 중앙통신·민주조선)
- 대통령('통준위' 발언) 등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괴뢰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것은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이며,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제도를 해치기 위한 체제통일"이라고 왜곡 비난(7.24,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담화(7.25)】 차 대통령의 북핵(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등)발언 관련 '진짜 걸림돌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과 그에 맹종하고 있는 박OO일당'이라며 실명거론 원색적 비난(7.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발부과 4.16연대 압수수색 등을 거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리에 올라왔은 결과'라며 '남조선에 조성된 폭압정국이 박OO의 독재정치, 공포통치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비난 및 탄압책동 중단 요구(7.2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핵 포기 없다”...“이란 핵협상 우리와 다르다”(7/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 것을 기화로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조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대해 “자주적인 핵활동 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란이 이룩한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실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이란 핵 합의를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적 적대행위와 최대의 핵 위협이 항시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임.
- 북한, 평양 외교관들에 ‘김정은 비방 매체’ 반입 금지령(7/22, 연합뉴스)
 - 영국 외무부는 22일 ‘2015 상반기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외무성의례국(의전국)이 지난달 26일 평양 주재 외교 사절과 국제기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한은 ‘최고지도자(김정은 제1위원장)’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사진과 영화, 문학작품도 일절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전함.
 -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인권과 관련한 국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일본법원, 조선총련 의장 차남 보석 결정(7/22, 교도통신)
 - 일본 교토(京都)지법은 외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중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의 차남 허정도 씨의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22일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교토지법은 허정도 씨와 함께 기소된 조선총련 산하 무역회사 사장 김용작 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함.

사. 대러시아

- 북한, 러시아 영화제 개막…김정은 ‘큰 관심’ 표명(7/24, 스푸트니크방송)
 - 러시아 스푸트니크방송은 제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러시아 영화 주간 행사가 지난 20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24일 보도함.
 - 김인범 문화성 부상은 축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친히 러시아 영화 상영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이번 행사가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체코, 북한 또 비판...“북한 선거방식 국제법 위반”(7/22, 미국의소리)
 - 체코 외무부는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선거가 국제법에 따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함.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7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라오스 대사(폰캄 인타부아리)와 담화(7.20, 중앙통신)
- 日 헌법학자 90%의 “안전보장관련법 개정은 헌법위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일본당국이 끝끝내 침략전쟁의 길로 나아가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경고(7.21, 중앙통신·민주조선)
- 리수용(외무상), 7월 21일 주북 라오스(폰캄 인타부아리)·말레이시아(모하마드 니잔 빈 모하마드) 대사와 각각 담화(7.21, 중앙통신)
- 재일본조선 청년학생 대표단(단장 :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총 부위원장)·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신중수), 7월 21일 각각 평양 출발(7.21,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근대산업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것 관련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위는 상처 입은 아시아 나라들의 감정을 외면하고 일본의 편역을 들어주며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지적하며 등재결정 후 ‘강제노역 불인정’ 발언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주장(7.2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의 ‘北 미사일 위협’ 이유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北 미사일 위협을 광고하여 한반도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킴으로써 경제위기에서 허덕이는 美군수독점체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려는 목적’이라고 비난(7.2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7월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태국 대사(티라쿤 니욘) 신임장 접수 및 담화(7.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이집트 대사, 7월 23일 自國 ‘7월23일혁명’ 63주년을 즈음하여 리수용(외무상) 등을 초대한 가운데 연회 마련(7.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北 인권상황 세계 최악 평가’에 대해 “우리(北) 식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릴 야망실현 기도”라고 반발 및 ‘북한 식 사회주의 고수’ 강조(7.24, 중앙통신·노동신문)
- 베트남 신문 ‘연전’ 대표단(단장 : 판 후이 히엔 부총주필), 7월 24일 평양 도착(7.24, 중앙통신·평양방송)

- 美국회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합참의장 내정자발언(北·러 등이 미국과 세계의 주요적수, 북핵 및 미사일개발이 韓日에 직접적 위협 조성) 등 관련 ‘북조선 위협론으로 저들의 아태 중시전략을 강행 추진하여 주요 대국들을 제압해 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라고 비난(7.25, 중앙통신)
- 일본 오카야마현 북일우호대표단(단장: 미하라 세이스케), 7월 26일 만경대 방문 및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 참관(7.26,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열차 공장 둘러보다 애절한 ‘사부곡’(7/20, 조선중앙통신)
 -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19일 북한 최대의 열차 생산지인 평양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함.
 - 그는 “기업소를 돌아보니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 생각이 갈마든다”며 선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수령님과 장군님께 있어서 열차는 집무실이었고 집이었다”며 “수령님과 장군님을 좋은 철도에 편히 모시었더라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절절하게 말했다고 덧붙임.
- 북한 김정은, 지방의회 선거서 투표…첨단전동차 개발지시(7/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19일 평양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2호 분구, 서성구역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2호구 선거장에 나가 선거에 참가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연못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 운전사 허명금과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2가공직장 직장장 신순태에게 투표했다”고 설명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어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를 현지도해 관계자들에게 철도 현대화를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날로 늘어나는 철도수송과 교통운수 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또 “첨단기술이 도입된 새 세대 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최단기간 안에 우리 식의 지하 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강석주 비서 심하게 아파 몸무게 20kg나 빠져”(7/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울프강 노박 전(前) 유럽의회 의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스터 강(강석주)이 매우 아픈 것(seriously ill)을 보고 놀랐다”며 “그는 병원에서 나와 우리를 맞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강 비서의 건강상태와 관련 “과거 장기간 등장하지 않았고 최근 사진을 볼 때 건강 이상 가능성은 커 보인다”며 “다만, 최근 쿠바를 방문한 점을 보면 업무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북한 강능수 전 부총리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7/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동지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김일성훈장 수훈자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강능수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졸업한 강능수 의장은 문학평론가로 이름을 알리고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김일성·김정일 일가 우상화를 전문으로 하는 창작 집단인 4·15문학창작단의 단장을 맡았다고 설명함.
 - 또한 1999~2003년, 2006~2010년 두 차례 문화상을 지냈고 2010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2010~2014년에는 내각 부총리를 역임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돌아온 ‘북한의 괴벨스’ 김기남, 김정은 현지시찰 수행(7/2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미교육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신축 현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수행했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김기남 비서는 1960년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책임주필, 1990년대 선전선동부장과 선전담당 비서로 활동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의 정당성 확보와 이상화에 공헌한 실세라고 설명함.
- 또한 그는 지난 4월 8일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2주년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끝으로 3개월반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에서 핵심 당 비서임에도 주석단 맨 앞줄이 아닌 방청석 세 번째 줄로 밀려나는 ‘수모’까지 겪었다고 덧붙임.
- 하지만 김기남 비서가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그가 여전히 북한의 선전선동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당 비서 겸 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지방의회 투표 찬성률 100%…“국제사회 비판적”(7/21, 조선중앙통신, 미국의소리)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모두 2만8천45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보도함.
 - 각급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 투표를 던졌으며, 이번 선거에 불참한 선거자는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선거자들 뿐이라고 통신은 설명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선거가 전세계 어디서든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으며, 그는“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며 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 결과를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했다고 덧붙임.
- 북한, 김일성·김정일 동상 또 건립…평성서 제막식(7/2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돌에 즈음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평안남도 평성시에 높이

모셔졌다”고 보도함.

- 22일 열린 동상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곽범기 노동당 비서, 로두철·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반미 장병결의대회…지도부 대거 참석(7/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전략군(로켓 운용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24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함.
- 행사에는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고 전함.
- 연설에 나선 리영길 총참모장은 “우리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쳐물리치고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린 영웅적 군대, 영웅적 인민”이라고 자국군을 치켜세웠다고 전함.
- 그는 이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반제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 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하는 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성스러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 북한, 전국노병대회 거행…내부 체제 결속 강화(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제4차 전국노병대회가 25일 평양 4·25문화회관 대회장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전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했다”고 보도함.
- 이번 전국노병대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와 항일투사, 전쟁노병, 전시 공로자, 비전향 장기수, 일꾼들이 참석했으며 군인과 청년학생들도 방청객으로 참가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전국노병대회는 반제혁명전쟁에서 백승을 아로새겨온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 전통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라면서 “전화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은 새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노병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며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 청년들을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함.

-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보고를 통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의 그 정신, 그 전통을 이어 침략자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우리 민족과 노병들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축포를 장쾌하게 쏘아올릴 것”이라고 말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북한, 민족유산보호법 제정...문화유산 관리 강화(7/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종전의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 발표했다”고 보도함.
 - 모두 6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이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함.
 - 통신은 “민족유산보호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유산을 더 잘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北, 서해 동창리에 67m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세웠다(7/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지난 2013년 말부터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시작한 북한은 최근 17m를 더 높여 67m 크기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22일 밝혔다고 보도함.
 -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세워진 이 장거리 로켓 발사대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 로켓(30m) 보다 2배 크기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군과 정보 당국은 분석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증축된 동창리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3호보다 길이가 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北, 장거리로켓 발사 착착 준비...‘10월 위기’ 오내(7/24, 연합뉴스)
 -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한이 올해 들어 장거리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정보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대를 기존 50m에서 67m로 높이는 증축 공사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사대 증축이 완료되면 북한은 길이가 은하-3호(30m)의 2배나 되고 사거리는 1만 3천km를 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설명함.
 - 뉴스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장거리 로켓을 ‘축포’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 현지지도(7.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정전협정체결일(7.27) 즈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수령제일주의와 조국에 대한 사랑, 수령관과 조국관이 하나로 결합된 애국충정의 정신’이라며 ‘반제반미대결전에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면 군민대단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7.2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파키스탄 北대사에 ‘김태섭’ 임명(7.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의 ‘주적’은 ‘美·日·남한(계급투쟁의 주대상)’이라며 쉰민은 ‘확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제국주의자들·계급적 원수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反帝反美교양·계급교양 강화’ 강조(7.24,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종업원들, 7월 24일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쫓기모임 진행 및 장혁(철도상) 등 참석(7.24, 평양방송)
- 김영남, 7월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이집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7.2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7월 27일 0시 정전협정체결 62주년을 맞아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낙랑구역 동산동지구 용성-서포-역포 철길주변 살림집 건설정형 요해(7.26,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여성근로자들 출산휴가 3개월 늘려(7/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법 제66조와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했다”고 보도함.
 - 이번 법의 개정으로 북한 여성 근로자들은 근속 연한에 상관없이 정기 및 보충 휴가 외에 받던 출산 전 60일, 출산 후 90일의 휴가가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바뀌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러한 법의 수정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이 차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북한의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였다”고 설명함.
- 북한, 경제개발구 외자 유치 총력…부동산·보험 규정 마련(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경제개발구 부동산 규정과 경제개발구 보험 규정이 채택됐다”고 보도함.
 - 이는 북한이 전국 19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하나로서 새로운 부동산 및 보험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함.
 - 통신은 “규정에는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 이용, 부동산 임대료와 사용료, 보험 계약과 보험 지사, 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밝혀져 있다”고 설명함.
- 북한, 두만강 관광상품 개발…‘유커’ 유치 팔건어(7/23, 연합뉴스)
 - 23일 중국 지린(吉林)성 여유(관광)국에 따르면 북한 나선시와 지린성은 최근 창춘(長春)에서 새로운 두만강 관광노선을 개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이 자리에는 조광선 북한 나선시 관광국장과 자오샤오쥘(趙曉君) 지린성 여유국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해 서명했으며, 양 측은 MOU에서 하루짜리

- 두만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외에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한 중·북·러 3개국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해상을 통한 국제관광코스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자본주의의 꽃’ 광고…북한서도 개화할까(7/26,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6월16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경기를 중계했는데 이 화면 속에 개성 고려인삼, 평양 건재공장, 조선금강그룹 등 북한기업 광고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2009년 7월 대동강맥주는 조선중앙TV를 통해 광고를 시작했으며, 이후 옥류관 또한 광고를 시작했으나, 당시 북한의 광고 시도는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막을 내렸는데, 그 배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런 광고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한 짓"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는 후문이 들린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2012년 제3호에 실은 ‘수출품 광고의 이용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광고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고법을 정확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학보는 이어 “사회주의 사회에서 광고법은 내부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스며드는 것을 막고 모든 광고활동이 사람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사람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혼잡통행료 4억여원 미납(7/2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 필립 하몬드 영국 외무장관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혼잡통행료 미납 실태 자료를 인용해 북한대사관의 미납액이 35만 5천

달러(4억 1천 만원) 규모라고 보도함.

- 혼잡통행료 부과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혼잡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8만 174건, 액수는 1억 3천600만 달러(1천57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1천979건 위반에 미납 금액은 35만 5천 달러였다고 설명함.

■ 미국 재무부,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다시 발령(7/21, 미국의소리)

- 미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주의보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 상업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또한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에 담긴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사업이 나날이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선전(7.23,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고려항공 기내식 버거에서 김밥으로 바뀐다(7/20, 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은 20일 페이스북 웹페이지를 통해 “유명한 고려항공 버거는 더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고려항공은 지금까지 서양식인 버거를 승객들에게 제공해왔지만 이제부터 항공기 승객들은 기내식으로 김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유튜브 ‘인기’…구독자 5년만에 6배 늘어(7/23,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 중인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구독자는 23일 현재 1만1천733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0년 10월 구독자(1천903명)와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영상 조회수는 1천260만 5천432회로 나타났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 북한 주민들의 각별한 ‘단고기 사랑’…요리경연대회까지(7/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중북인 23일 평양 평양면옥에서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전국 단고기 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고 24일 보도함.
 -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전국 각급 식당에서 선발된 우수한 요리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출품한 단고기장(보신탕)과 단고기 요리들이 심사를 받았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北 SLBM 개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7/20, 연합뉴스)
 -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지난 20일, 5월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은 “동북아 정세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우리는 북한의 SLBM 개발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사령관은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해 ‘무엇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임.
 - 사령관은 또 북한 체제의 폐쇄성이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 올해 日 방위백서, 北핵탄두미사일 위협 강조(7/21, 연합뉴스)
 - 백서는 지난 5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두고 이는 “일본에 대한 공격 등의 도발적인 언동과 함께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백서는 “핵·미사일 개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을 사정안에 두는 핵탄두 탑재 탄도 미사일이 배치될 리스크의 증대를 거론함.
 - 다만 백서는 덧붙여 북한이 “빈번한 인사이동에 동반한 위축 효과로 외교적 고려 없이 군사적 도발행동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미국, ‘이란 핵합의 이후’ 한·중·일과 북핵 조율(7/22,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오는 25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순방에 나설 예정임.
 - 특사는 이번 순방에서 이란 핵협상 이후 변화된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올 하반기 안으로 동북아 3국과의 공조를 통해 인권문제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짐.

- 미 국무부, “북한 핵보유국 용인 불가…현재 대화 계획 없다”(7/22, 연합뉴스)
 -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북한은 명실 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은 데 대해 “북한이 핵보유국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언급함.
 - 이어 그는 ‘북한과 양자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며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답변함.

- 북한, “남한 도발 배후는 미국”…백령도 조준사격 ‘경고’(7/25, 연합뉴스)
 - 북한 인민군 관문점대표부는 남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벌이는 포사격 훈련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주장함.
 - 대변인은 “도발의 본거지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의 무차별적인 직접조준사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발이 계속될 경우 백령도 등 일대에 대한 조준사격 가능성을 밝힘.

- 사일러 美특사 방한…한미일중 ‘북핵’ 잇단 접촉(종합)(7/26,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북핵 특사는 26일 한국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중국, 일본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임.
 - 사일러 특사는 27일 오후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시작으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권용우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의 면담할 예정임.
 - 한미일을 중심으로 다음달 6일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공조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남북 및 북중간 접촉 여부도 주목됨.

나. 미·북 관계

- 미국 재무부,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다시 발령(7/2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 상업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함.

-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난달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임.

■ 미국, 北 불법 무기거래 지원 싱가포르 선박회사 제재(7/24,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지원해 온 싱가포르 소재 선박회사 세나트(SSC)와 이 회사의 회장 레오나르도 라이를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이 회사 소유 선박 ‘던라이트’를 동결재산 목록에 올림.
- 재무부에 따르면 SSC와 라이 회장이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C)를 광범위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OMMC를 대신해 무기구매 알선, 수리, 보증 등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짐.

다. 중·북 관계

■ 중국경제 흔들리면 북한도 위험…정치·경제 타격 불가피(7/20, 연합뉴스)

- 북한은 대외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경우 체제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전체의 71.8%, 수입의 경우 전체의 76.5%를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도 석유와 옥수수, 밀가루 등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치우쳐 있음.
- 이처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북한 정권에도 위협이 됨.

■ 중국, 김정은 제1위원장 “인민지원군에 경의” 발언에 주목(7/26, 연합뉴스)

- 중국 신화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5일 제4차 전국노병대회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경의와 감사를 표시했다고 보도함.
- 중국 언론이 김정은의 이번 발언을 보도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며, 냉각된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로 보임.

라. 일·북 관계

- 북한-일본, 5월 몽골서 극비리에 납치문제 협의(7/2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지난 5월 중순 몽골에서 극비리에 당국 간 협의를 진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지난해 7월4일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자국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 된 사람들을 귀국시키고, 일본은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짐.
 - 일본인 납치에 대한 북한의 전면 재조사 착수 1주년(7월 4일)을 앞두고 만난 양측은 북측의 납치문제 조사 내용, 일본의 대북 제재 복원 등을 의제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이 만남에서 ‘조사 시간’을 더 요구하였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의 동력을 유지시키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임.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남중국해 ‘역할론’, 한국이 결정할 일”(7/20,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트프트 미군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미국 일각에서 미·중 양국의 갈등이 격화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힘.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과 생물방어 프로그램 지속 협의”(7/24,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한미 양국이 최근 탄저균 배달사고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합동실무단을 채널로 삼아 생물 방어 프로그램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힌 것임.
 - 주한미군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생물 방어 프로그램이 한국 국민과 양국 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측 파트너들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 시진핑 주석, 한반도유사시 담당 창춘 군부대서 “훈련·관리강화”(7/20,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유사시를 담당하는 군부대를 방문, 엄격한 부대관리와 함께 전투태세를 확고히 하라고 주문하였는데, 그는 지난 18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소재 16집단군을 방문해 지휘급간부와 병사들을 접견하고 엄격한 부대관리를 촉구함.
 - 시 주석은 8·1 건군절을 앞두고 이날 오후 선양군구에 속한 16집단군을 시찰한 자리에서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를 적용하고 강군(強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선양군구와 16집단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점에서 이날 시 주석의 방문은 최근 북한 탈영병의 중국인 살해 및 탈북자 난동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됨.

다. 한·일 관계

- 일본 방위백서, 11년째 ‘독도는 일본땅’…한국, “침탈부정” 강력반발(7/2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함.

-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이며,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됨.

라. 한·러 관계

- 한-러 극동-시베리아개발공동위 회의 9월 5일 개최(7/23, 러시아의 소리)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경제포럼(EREF) 차원에서 극동-시베리아개발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 외에도 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세션 및 '국가 간 대화의 창'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 및 기타 외국 협력 기업인들을 위한 개별적인 행사도 계획돼 있음.
 - 특히 9월 3일 열리는 극동경제포럼에서는 9월 5일 극동-시베리아개발공동위원회와 한-러 도지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남북러 삼국 프로젝트를 논의할 '한반도 대화' 회의가 열릴 예정임.

마. 미·중 관계

- 中, 남중국해서 상륙훈련 실시...美 견제행보에 '맞불'(7/20, 연합뉴스)
 - 중국해군이 최근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음.
 - 이번 훈련이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의 발언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맞불놓기'식 대응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 시진핑 주석-오바마 대통령, 이란 핵합의 이행 협력 다짐(7/21,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합의안 이행을 위한 협력을 다짐함.
 - 시 주석은 이어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중·미 양국은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했다"며 "이는 양국 간 신형대국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실현시킨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중국과 협조·협력, 공동 노력을 통해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함.
- 미국, 공무원정보 해킹 책임 중국에 묻지 않기로(7/22,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연방인사관리처(OPM) 해킹사건의 책임을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묻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소니 해킹사건에서의 대응과 대조를 이룸.
 - WP는 미국 정부가 이런 방침을 보인 가장 큰 이유로 해킹의 중국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이버 첩보능력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함.
- 오바마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은 ‘중국 견제’(7/25, 연합뉴스)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찾는 데에는 아프리카 최대 투자국이자 주요 자본 공여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아프리카-미국 간의 경제 협력관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시도라고 전함.
 -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원조하고 교역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최대 파트너로 자리잡음.
 -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의 하고 있다고 분석함.

바. 미·일 관계

- 러셀 美 차관보, “아베, 반성의 마음 밝힐 방법 찾아야”(7/22, 연합뉴스)
 - 러셀 차관보는 21일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의실에서 열린 남중국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대전과 관련해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말은 이번 70주년 담화에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지만, 그는 반성의 수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日 자위대-미군 기뢰제거 합동훈련 공개(7/23, 연합뉴스)
 - 일본 해상자위대가 22일 미국 해군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기뢰 제거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미일의 기뢰 제거 합동 훈련을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에 추진력을 더하려는 포석으로 보임.
 -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훈련에 해상자위대 함정 18척, 항공기 9대와 대원 850명이 참가하였고, 미 해군은 기뢰 제거 함정 2척, 항공기 3대 등이 참가함.
 -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를 자주 거론함.

사. 미·러 관계

- 러시아, 20여년 후원 미국 재단 철수...러 정부 탄압?(7/24, 연합뉴스)
 - 미국의 저명 비정부기구로 러시아에서 20년 이상 활동해온 ‘맥아더 재단’이 “최근 러시아에서 통과·시행된 일련의 법률로 인해 국제 재단이 이곳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유망한 단체를 지원하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밝히며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
 -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맥아더 재단이 러시아에 지원해온 금액은 1992년 이래 1억7천300만 달러(2천8억5천300만 원)가 넘으며, 러시아의 교육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핵무기 확산을 제어하는 활동이 주로 후원을 받았다고 전함.

아. 중·일 관계

- 일본방위백서 계기로 중·일 동중국해 신경전 재가열(7/22, 연합뉴스)
 - 중국 위협을 강조한 일본의 2015년판 방위백서 내용이 공개된 뒤 중·일 간에 동중국해를 둘러싼 신경전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음.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백서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식 항의함.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동해(동중국해)의 분쟁 없는 관할 해역에서 원유·가스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일본 측의 발언을 일축함.

- 중국, 아베 총리 방중 조건으로 '야스쿠니 참배 안 한다' 약속 요구(7/23, 연합뉴스)
 - 중국이 9월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음.
 - 3대 조건은 각각 (1)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 (2) 국교정상화 당시의 중일공동성명,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이른바 4대 정치문서를 준수할 것, (3)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계승할 것임.
 -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2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런 전제 조건은 전혀 없는 채로 했다”며 보도를 부인함.
- 中, '리덩후이 前대만총통-아베 회동'에 강력 반발(7/25, 연합뉴스)
 - 중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방일 중인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회동 소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중일공동성명'에 담긴 원칙과 중국에게 한 정중한 약속을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중·일 관계에 새로운 정치적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한다고 강조함.

자. 중·러 관계

- 제2차 대중국 가스공급계약 체결 무기한 연기(7/22, 러시아포커스)
 - '알타이' 가스관(또는 '시베리아의 힘 2')을 이용한 대중국 가스공급 계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됨.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에너지 수급 재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가스프롬은 중국석유천연가스(CNPC)에 '알타이' 가스관 건설에 드는 높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어 높은 가격을 제시함.
 - 반면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고 건설 비용도 투명할 수 있도록 가스관 건설 공개입찰을 제안하면서 가스관을 건설하되 좀 더 저렴하게 짓겠다고 밝힘.

차. 일·러 관계

- 러시아 총리, 북방영토 '에트로후섬' 방문 검토..日 '자극'(7/24, 교도통신)

-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8월 24일 쿠릴열도 이투롭(일본명 북방영토 에트로후섬)에서 개최되는 정부 행사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음.
- 도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북방영토의 실효 지배를, 젊은 세대가 계승하는 모습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총리가 방문하면 경제 시찰보다도 강하게 일본을 자극하는 일임.
- 푸틴 정권은 차세대의 애국주의 고양을 목적으로 해마다 매년 여름에 캠프 프로그램 형식으로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지방의회 투표 찬성률 100%…“국제사회 비판적”(7/21,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9일 실시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99.9% 투표율에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모두 2만 8천45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보도했음.
 - 각급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 투표를 던졌음.
 - 이번 선거에 불참한 선거자는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선거자들 뿐이라고 중앙통신은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이번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모두 2만 8천452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꾼들이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음.
 - 4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함.
 - 또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參審員)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함.
 - 주로 지방당 중간 간부들이나 모범적인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 추천으로 결정됨.
 - 북한은 선거가 “세상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면서 평등·직접·비밀 투표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형태여서 그동안 모두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였음.
 -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거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선거가 전세계 어디서든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음.

-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며 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 결과를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했음.
 - 영국 정부도 이번 선거 절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투표가 강제적이었을 뿐 아니라 대의원 선출 방식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음.
 - 영국 외무부 공보실은 “각 선거구에 단일후보만 출마하고 그나마 비밀투표도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북한, 평양 외교관들에 ‘김정은 비방 매체’ 반입 금지령(7/22,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했음.
 - 영국 외무부는 22일 ‘2015 상반기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외무성 의례국(의전국)이 지난달 26일 평양 주재 외교 사절과 국제기구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음.
 - 북한은 ‘최고지도자(김정은 제1위원장)’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사진과 영화, 문학작품도 일절 반입할 수 없도록 했음.
 - 반입 불가 대상에는 인쇄물과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 등 사실상 모든 매체가 포함됨.
 -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인권과 관련한 국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또 “올해 상반기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태도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했음.
 - 영국 외무부는 지난 3월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분류했음.
 - 북 국경군인, 탈북 비밀통로 운영(7/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계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간헐적으로 도강에 성공하는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6월 하순, 두만강을 통해 중국으로 무사히 나온 30대의 한 북한 여성은 “탈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경비대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경경비대가 자기 관할 구역에 비밀통로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음.

- 후에 나오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빠져나온 비밀통로를 밝히지 않겠다고 전제한 이 여성은 “잠복근무에 동원되는 군인들은 탈북자들을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통로로 안내하고 있다”며 “그러면 중국에 대기하고 있던 브로커들이 넘겨받아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북한군 당국은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 무산군 지역의 주요 탈출통로에 높이 2.5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벼랑이 있는 험한 구간에는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열악한 보급난에 시달리는 국경군인들은 상부의 눈을 피해 탈북자들을 넘기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임.
- 국경 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자기가 넘겨준 주민들이 중국에 갔다가 다시 잡혀 되돌아오는 경우라며 중국 국경지역에 인민해방군이 전개됐다는 소식이 북한에 널리 퍼졌다고 언급했음.
-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국경을 넘어 강도 행각을 벌이자, 중국 당국은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을 전격 풀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음.
- 6월 중순에는 탈북자로 추정되는 북한인 1명이 중국군의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음.
- 이처럼 중국 측 경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힐까봐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것임.
- 그는 “현재 도강 비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화 1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며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탈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이 자금을 마련해 가족들을 구출하는 경우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배급 불균형으로 2025년에도 北주민 50% 식량부족”(7/23, 데일리NK)

- 북한 당국의 배급 불균형으로 오는 2025년에도 주민의 50% 가량인 1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식량안보 평가 2015’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 주민 17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정은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보고서는 이어 “10년 뒤인 2025년에도 소득 불균형과 분배의 문제로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들의 하루 평균 2100kcal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는 아시아 평균인 2500kcal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면서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특히 보고서는 2025년 식량 배분 격차가 올해 23만 5000t에서 약 10t 가량 감소한 14만t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는 격차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영양 섭취 권장량 (2100kcal)을 섭취하려면 14만t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임.
-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스테이시 로슨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0년 뒤 곡물 필요량과 생산량의 격차인 절대식량 부족분은 없을 것”이라면서 “식량 부족분이 생기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의 하위 1300만여 명은 2100kcal 이상을 섭취할 능력이 없어 여전히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북한 “남북대화 하려면 분위기부터 조성하라”(7/24, 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광복 70주년을 앞둔 우리 측의 남북대화 제의를 “낮간지러운 수작”으로 깎아내리고 남북대화를 하려면 먼저 마주앉을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는 24일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기고한 글에서 남측의 대화 제의를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반민족적 죄악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뻔뻔스러운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북남관계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에 추종한 괴뢰패당의 악랄한 대결정책으로 하여 도저히 마주앉을 수도 없고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서 남측에 대해 대결정책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북한은 그러면서 남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미국과의 연합군수지원 훈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등을 남한측 대결 책동의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 그는 이어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 대결정책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외세의 꼭두각시는 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남측의 대화 제의가 여론 호도용이라고 주장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남측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신문은 남측의 대화 제의는 “우리에게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씌워 북남관계 파국으로 저들에게로 쏠리는 규탄 여론을 모면하고 대결정책을 합리화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음.
 - 이어 “괴뢰들이 추구하는 것은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이며 그들이 꿈꾸는 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해치기 위한 체제통일 뿐”이라며 “자주 의식이 없는 하수인들은 대화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또 “괴뢰들이 들고나온 ‘대화과 압박 병행전략’이라는 것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위협, 공갈을 위해 들고나온 대화와 제재의 ‘두길 전략’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어 남측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을 통해 약속한 민족자주의 원칙과 평화번영의 정신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거듭 요구했음.

2. 북한인권

- 대북압박 강화하는 미국, 하반기 ‘북한인권’ 제재 나오나(7/21, 아시아투데이)
 - 이란 핵 협상의 타결로 미국은 이제 북한만이 지구상 유일한 핵 협상 대상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손을 내밀기보다 오히려 인권 문제 등에서 더욱 대북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와 제재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비확산 제재 대상은 모두 135개(개인 52명·단체 83곳)로 집계됐음.
 - 이 중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을 가진 국가는 이란으로 모두 40개(개인 10명·단체 30곳)에 달했음.
 - 이 중 의회가 제정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의 적용을 받는 제재 대상은 3개, 나머지는 13382호 등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음.

- 이란 다음으로 제재가 많이 부과된 국가는 북한으로 16개(개인 5명· 단체 11곳)에 이룸.
- 이는 이란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중장기적으로 비확산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이 미국의 최다 비확산 제재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설명임.
- 이란과 주요 6개국(P5+1) 간의 합의에도 당분간 미국의 대(對) 이란 비확산 제재는 유지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합의 도출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재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한 외교소식통은 “이란에 대한 비확산 제재가 북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도와 폭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며 “이란 핵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비핵화 대화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로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외교가에서는 특히 “미국이 재무장관·국무장관간 협의를 통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을 상대로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올해 하반기 중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실제 지난 5월 방한했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미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또 같은 달 열렸던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3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6자회담 틀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압박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음.
- 다만 북한 내부구조의 특성상 인권문제를 미국이나 국제사회 등 외부에서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해외 북한인권 관련 단체 40여개…캠페인·로비 등 활동 활발(7/26, 연합뉴스)
 - 해외에도 비정부기구(NGO) 형태로 캠페인과 로비, 학술연구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6일 ‘국제 북한인권 NGO 현황’ 자료집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NGO 41개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 미국북한인권위원회(HRNK), 북한자유연합(NKFC) 등 미국을 거점으로 하는 단체가 22개로 가장 많았고, 영국의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 등 유럽 단체도 11개에 달했다.
 - 북한난민구원기금(LFNKR), 북한민중구조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등 일본 단체가 4개였으며,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HRNC Canada), 브라질 코넥타스 등 기타 국가의 단체가 4개였음.
 - 이 단체들은 캠페인, 로비, 학술연구에서부터 중국 내 탈북자 구출, 북한 내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직접 개입'까지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음.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규모 기아·탈북 사태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해외 NGO들이 2000년대 들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등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활동 초기에는 캠페인,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슈화'에 주력했던 이 단체들이 청원서 제출, 각국 의원 면담, 대사관 앞 항의시위 등을 통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개입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음.
 - 또 최근에는 국제적 파급력을 높이려고 NGO들간 연합을 통한 공동활동 비중이 커졌으며, 북한 반인도범죄 증거 수집과 인권 탄압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 법적 처벌을 목표로 활동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3. 탈북자

- 유엔, 캐나다에 탈북자 등에 적용되는 난민보호법 재검토 권고(7/25, 미국의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일명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3일 캐나다가 제출한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등에 적용되는 캐나다 난민보호법

- 일부 조항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
- 출신지정국 국적의 개인들의 경우 1차 심사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난민항소부에 항소할 수 없고, 다만 연방법원의 법률적 검토만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제로 난민항소부는 새로운 증거를 허용하는 등 난민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연방법원은 1차 심사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
 -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음.
 -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 등 42개 나라에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가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난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게다가 1차 심사에서 거부된 뒤에 난민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됐음.
 -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출신지정국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난민보호법을 재검토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권고했음.

4. 이산가족

- 통일부, 25~26일 ‘이산가족 통일체험 빌리지’ 개최(7/20, 연합뉴스)
 - 통일부 산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오는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센터 내 가족빌리지 개장에 맞춰 미상봉 이산가족을 초청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이산가족 통일체험 빌리지’ 행사에는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4명이 참가하며, 연령층은 3살부터 89세까지 다양함.
 - 이산가족 1·2·3세대는 첫날 오후 관문점을 방문한 뒤 경기도 연천 소재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가족 간 소통 및 힐링의 시간을 갖고, 둘째 날 분단 현실 및 통일미래 체험, 통일캐릭터 만들기 등의 행사에 참여함.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낙도 오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청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이산가족·금강산관광 대북대화 제안 검토…대북특사도 고려”(7/23, 헤럴드경제)
 -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대북 대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임.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적절한 계기에 대화 제의건 뭐가 됐건 좋은 시점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당국자는 “북측이 굉장히 경직된 상태고, 대화를 하겠다고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북측이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통로를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강산 관광이 7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라는 얘기임.
 -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다만 과거와 같은 민간 브로커 등 비선라인을 통한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음.
 - 이와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중인 8·15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선 정치적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당국자는 또 “정부의 기본 입장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니 정치적 행사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민간행사를) 통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니 정치적인 논란이 안 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단체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측 인사의 평양 행사 참석 등 본행사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당국 간 대화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임.
 -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가능하면 민간을 통해서라도 많은 접촉을 하고 이를 통해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 중”이라며 “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민간교류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다국적 제약사, 소아 당뇨병 인슐린 북한 등 34개국 기부(7/20, 미국의소리)
 -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는 북한을 포함한 34개 개발도상국에 소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앞으로 3년 간 매년 26만 병씩, 총 78만 병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 일라이릴리 측은 국제당뇨병연맹의 ‘어린이에게 생명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인슐린 80만 병을 기부해왔음.
 - 북한은 지난해 8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돼 2천 520개의 인슐린을 지원받아 140명의 소아 당뇨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NGO, 올 상반기 대북 식량·의약품 컨테이너 6개 분량 지원(7/22,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올 상반기 북한에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담요, 의약품, 수도 시설 장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의 수도 시설 설비를 지원한 데 이어 4월에 두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고, 5월에 두 컨테이너, 6월에 한 컨테이너 분량의 식량과 담요를 보냈다는 설명임.
 - 특히 5월에 보낸 지원품에는 미국의 구호단체 ‘스톱 헝거 나우’가 기부한 영양쌀 28만 5천 명 분이 포함됐다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다.
 - 스미스 국장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과거에는 쌀과 메주콩을 지원했지만 지난 몇 년 간 고기통조림 밖에 보내지 못했다며, ‘스톱 헝거 나우’가 기부한

- 영양쌀을 북한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한 식량과 담요, 의약품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29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에 보내짐.
 - 지난 1995년 설립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에서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했음.
 -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B형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 중 수집한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B형 간염이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항바이러스 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말기 간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간염 예방과 치료 계획을 공중위생부에 신청해 인가 받았다고 밝혔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북한 결핵 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후원하는 의료 시설에 온실과 수도 시설,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 주고 있음.
 - 이 단체는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새로 우물을 판 진료소 두 곳에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11월에도 현지에서 올해 지원한 물자를 확인하고 결핵연구소와 간염 예방과 치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美 대북지원단체, 北에 ‘옥수수 60t·밀국수10t’ 지원예정(7/24, 데일리NK)
- 미국 내 한인 대북지원단체인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오는 8월 북한에 옥수수 60t과 밀국수 10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윤유중 단체 대표는 중국 단둥(丹東)에 식량과 물품이 준비돼있다고 8월 중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단체는 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일축구공’ 100개도 지원할 예정임.
 - 이어 윤 대표는 “(8월에) 북한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식량이 지원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단체가 지원한 옥수수는 강원도 원산의 국수공장으로 전달돼 매달 10t씩

강냉이국수로 만들어져 강원도 인민병원과 문천의 중등학교, 원산의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애육원, 유아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한편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북한에 식량을 포함해 다양한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지원단체, 대북활동요원 모집 붐(7/24,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 지원단체의 활동과 요원 모집과 관련한 정보를 소개하는 전문 인터넷 매체인 릴리프웹(reliefweb)을 보면 24일 현재 5개 국제단체가 최소한 11명의 북한에서 활동할 요원을 찾고 있음.
- 이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해 컨선월드와이드, 프리미어위장스 등 식량이나 식수, 의료 시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 봉사단체들임.
- 북한에서 활동할 요원을 모집하는 내용이 한 두 건에 머물러 왔던 것과 비교해 눈에 띄게 많아졌음.
-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6월에 각각 한 건씩의 대북 요원 모집 안내가 소개됐지만, 이 달 들어서 7건이 잇따라 공개됐음.
- 독일 세계기아원조는 유럽연합의 자금으로 진행 중인 ‘재난위험감소와 식량안보’ 사업의 북한 내 최고책임자를 찾고 있고, 프랑스의 국제지원단체 프리미어 위장스와 덴마크 단체 미션 이스트,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는 식량안보와 식수개선 등 자체 북한지원 사업 책임자를 모집 중임.
- 북한에서 활동했던 전직 요원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북한에서의 임무 수행과 거주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상했음.
-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 요원은 설명함.
- 이밖에 북한 사무소로 운영비를 보내려는 국제 송금 수단이 막혀 있는 것도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임.
- 북한의 외환 거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로 거래할 수 없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임.
- 국제지원단체들은 북한 사무소로 운영비를 보내지 못해 제3국의 북한 공관을 통한 지급이나 현금을 직접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요원들의 급료는 본국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외국에 나가서 직접 현금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북한동향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7.23)】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후 ‘괴뢰패당의 진보민주 통일세력에 대한 파쇼적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파쇼폭압통치로 얻을 것은 준엄한 심판과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비난(7.23,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